

[오피니언]

김지하 칼럼



나의 인생에 관하여 누구나 말하듯이 '나의 인생은 성공이라든가' '나의 인생은 실패'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참으로 답답한 가운데 어떤 속이 확 뚫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내가 내 인생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데에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다음과 같다. '개자식' 이야기다.

나의 인생에 관하여 어떤 분이 언젠가 무슨 일 때문에 날더러 '개자식'이라고 욕한 적이 있었다. 우선 그분의 인품으로 보아 할 만한 말이 아니어서 크게 놀란 중에 그분은 한숨을 떠 여러 사람을 붙잡고 내가 개의 몸에서 나오는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노라고 내내 떠들어대며 욕을 하는 거였다.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그저 민망하고 서러울 뿐 다른 할 말이 없었다.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모든 것이 내 부덕의 결과로서 내가 나서서 변명하거나 마주 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야말로 스스로 가슴만 치며 '내 탓이요'를 되풀이할 뿐 다른

말은 '민중'이라면 어찌 되는가! 이런 생각을 새삼 하게 되었다. 만약 참으로 '민중'이라면, 만약 참으로 그 '민중'이 성경에 나오는 이른바 저주받은 자들, '네배워야'라던, 그래서 예수가 하늘나라에 가는 가장 큰 적임자라고 추켜세운 바로 그 말바다 민중을 뜻한다면, 내가 참으로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셈이었다.

나의 인생이야기

나는 참 모질도록 긴 세월을 고통과 수난을 견디며 살아왔다. 이른바 '비극적 명성'으로 세계적인 입에 오르내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나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적은 행여라도 그 헛된 명성, 그 사실은 동정심이나 봐줘서 주는 헛 점수에 그만 껌박 속아 스스로 무슨 큰 인격자나 되는 듯이 착각하게 되는 가능성이 컸다는 사실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허정



출산을 저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과거 출산저하의 위기를 겪은 선진국들이 어떻게 정책을 집행해 위기를 수습했는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다행히 인구감소의 폭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지원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사회가 변해 이전 여성당 2.5명~3명의 출산율에서 1.15~1.2명 정도의 OECD국가에서 가장 적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2300년도는 한국의 인구가 제로에 가까울 것이

기고

노두근



자연의 섭리는 오묘하다. 설 연휴를 전후해 들뜬 세차게 몰아치던 눈보라는 어둡고 추운 겨울을 더욱 심오하게 하고 알 수 없는 허허함으로 가슴을 후벼낸다. 기축년 정월 초입에 들어서니 언제 그랬느냐 싶듯이 찬기가 고요하다.

미국이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대신 2009년에는 ICK(인도·중국·한국)가 투자유망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라고 전세계에 타진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 가능하다

라는 경고성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인 장려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출산 폭은 너무나 커 지속적인 정책이 절박한 실정이다. 우리가 20년 전에는 1년의 출산이 100만명 이상 15년 전엔 85만명 정도 10년 전엔 60만명 정도 최근에는 채 50만명도 되지 않는 저출산율을 생각할 때 분명 문제를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농어촌사회는 어린아이의 울음 소리를 들어본 지 오래다. 요즘처럼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시기에 2년 전 본원에서 자연분만으로 첫째부터 여섯째를 출산하는 산모가 생각난다.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은 자녀를 잘 낳고 국가와 사회에 큰 역할을 하는 인물로 키우는 것이 기성세대로서의 커다란 보람이 아닐 수 없다.

모두가 어우러지는 사회를 향해

정·퇴출, 실업자 대한 우려 등 어두운 기사들을 마구 쏟아냈다. 전남도에서는 경기가 침체되면 먼저 서민들이 가장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하고 경제위기극복 및 서민생활안정대책 마련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지난해 10월 부터 도 및 시군에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교수 등이 참여한 '서민생활안정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사회 안전망 및 서민지원대책을 점검해 왔다.

분명 희망의 메시지이다. 우리 서민들 가슴을 따뜻하게 해 줄 것이다. 전남도에서는 2009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 더욱 알차게 서민생활안정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초수급자 대학생활자금지원, 아동복지교사지원 등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총 23건의 복지시책에 1조 3천600억 원을 투자해 지속적으로 기초수급자·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업 괴롭히는 '블랙컨슈머' 결국 소비자 등치는 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약간 생소한 말로 들리겠지만 블랙컨슈머라는 말이 있다. 블랙컨슈머는 피해 보상을 노리고 제조업체를 협박하거나, 구입한 의류를 몇 번 입어보고는 옷에 하자가 있다는 식의 불만 이유를 옷을 반품해버리는 식의 직업적 문제제기자 또는 악성 고객을 일컫는 말이다.

블랙컨슈머들이 없고 우리 사회가 서로 믿는 건전한 사회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과자류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 제조사는 실수를 즉시 인정하고 적절히 보상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악의적으로 특정 이물질을 식품류에 투입한 뒤 제조사 잘못이라고 뒤집어 씌울 경우 제조사들은 그럴 리 없다며 보상을 해주지 않고 법적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런 문제가 더 커져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게 두려워 적절히 무마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를 좀먹는 이런 악성 고객들도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배니현·광주시 북구 장동동

파산면책 받아도 '족쇄' 여전...재기 시스템 필요

친한 동생이 의류 도매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해 감당하기 힘든 빚을 졌다. 그리고 얼마후 파산 면책을 받았다. 그 후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면서 재기를 위해 열심히 살아 왔는데 요즘은 부채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그 이유는 파산면책자라는 이유로 사회 곳곳에서 좌절을 맛보고 대부분 사회 시스템에서 거부물 취급을 당하기 때문이었다.

했는데도 렌터카업체 직원은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했더니 파산면책 코드가 떠서 방침상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물론 파산을 당했으니 사회적으로 일정부분 불이익과 제재가 따른 거야 이해를 한다. 그러나 어렵게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 재기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에게 파산면책자라는 꼬리표를 달아 '금융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 죽을 때까지 재기가 어렵다. 파산자들이 패자 부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배려와 재기의 여지를 남겨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김재형·광주시 북구 북동

시설

2015 하계 U대회 광주유치 성공하려면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U대회)의 광주유치를 지원할 범시민지원 추진협의회가 4일 출범했다. 범시민추진협의회는 U대회 개최도시가 결정되는 5월23일까지 국내 유치 보조성과 국제대학스포츠포럼(FISU) 실사단 환영행사 등 주요 행사를 주관하게 된다. 범시민 추진협의회는 범시민지원추진위원회와 더불어 광주유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U대회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더불어 광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계기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U대회 유치를 실패한 경험을 교훈 삼아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광주시민들의 관심과 의지다. 시민들의 참여 없인 U대회는 없다.

직한 행사들을 유치한 데다 현재 평창과 부산이 2018 동계, 2020 하계 올림픽 유치전에 올린 하고 있다. 여기에 3월 대한축구협회가 2018-2022년 월드컵 단독 유치 신청을 발표해놓은 상태다. 특정국가의 '솔림' 현상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관례상 '광주 유치'를 경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구촌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U대회는 단순한 국제 스포츠 행사가 아니다. 대회 개최지는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선명하게 각인된다. 대회유치에 성공하면 광주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투자유치와 관광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2015 U대회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더불어 광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계기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U대회 유치를 실패한 경험을 교훈 삼아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광주시민들의 관심과 의지다. 시민들의 참여 없인 U대회는 없다.

'발등의 불' 청년실업 대란 속수무책인가

20~30대 청년층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1천만명 아래로 미끄러졌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다 경기침체로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년실업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사회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20~3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990만 4천명으로 전년 1천2만7천명 대비 1.2%가 줄면서 1000만명 선이 무너졌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취업현장에서 20~30대 비중은 100명당 52.3명이었지만 지난해는 42명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광주·전남지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의 20대 취업자 수는 각각 10만7천명, 8만6천명에 불과했다. 이는 IMF 직 후인 10년 전 98년에 비해 10%, 41%가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청년실업이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150만명을 훌쩍 넘는 청년 백수가 이달에 졸업자가 쏟아지면 20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안전감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년실업은 개인과 가족의 커다란 고통인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자원의 낭비이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급속한 고령화사회로 전환하는 시점에 따른 젊은층의 부담증가라는 잠재적 불안요인에 '청년실업'이라는 불씨를 더하고 있다. 가족이나 취약한 젊은 세대가 '일자리'마저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불안의 뇌관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도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은 결속고만 있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행정 인턴제는 아르바이트 수준이어서 청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도 외국의 실업 사태를 헤쳐나가기에 역부족이다. 정부는 기존대책의 강도를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면 실업 비상사태라도 선포하라.

無等鼓

미국 정부가 갑자기 늘어난 저축률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소용돌이 치고 있던 미국인들이 경제위기로 앞날이 불안해지자 금원을 미국으로 옮기 시작한 때문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미국의 저축률은 2.9%를 기록, 직전분기(1.2%)는 물론 1% 미만인 1년 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분기 미국내 총생산(GDP)은 마이너스 3.8%로 떨어졌다.

미국 내 160여년 앞선 18세기 후반, 실학자 박제가도 같은 말을 했다. 그는 역서 '북학의'에서 "무릇 재물은 우물과 같다. 우물물은 퍼서 쓸수록 채워지는 것이요 이렇듯 인구가 많으면 말라버리고 만다"고 주장 했다. 나라 안에 여공(女工)이 어느 날 사라진 이유는 사람들이 비단옷을 입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생산-소비-재생산-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야 경제가 돌아감을 간파했기에 분명하다. 우리 경제도 내수부진 때문에 골머리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지난날 수출 감소율이 사상 최악을 기록한 가운데, 백화점들이 울라가 소비가 줄면 기업들은 점 판매까지 급감하고 있다. 부자들이 지갑을 닫았다는 얘기가. 절약의 역설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기와 한 장 아껴려다 지붕 전체가 썩어 내릴 수 있다. 사치하라는 말이 아니다. 중산층 이상만이라도 흠돈은 써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김주성 경제부장 jnews@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반)		편집국장 曹慶完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사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 자 인 2200-691	사 자 인 2200-691
사회 1부 2200-612	사 자 인 2200-571	조 사 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